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

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.9.29.(화) 14:30

통합위, 청소년 정책 권고안 마련 위한 2차 국민대토론회 개최

- **정서적 위기·학교 밖·이주배경 청소년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국민 의견 수렴**
- **'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', '청소년 전담조직' 등 핵심 정책과제 구체화 논의**

□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(이하 '통합위') 국민경청소통분과위원회는 29일(화) 고양 킨텍스에서 「모든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」를 주제로 현장형 국민대화 제2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.

○ 이번 토론회에는 성평등가족부·교육부·법무부·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청소년 지원기관, 현장 전문가, 국민패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그동안 제안된 청소년 정책과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.

□ 통합위 국민경청소통분과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익산·여수·대구·서울에서 현장간담회를 열어 정서적 위기 청소년, 학교 밖 청소년, 이주배경 청소년과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.

○ 이어 7월부터 수도권·전라권·경상권·충청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현장형 국민대화를 개최했으며, 지난 9월 14일 제1차 국민대토론회에서는 그동안 발굴된 정책 제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할 청소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.

○ 토론 결과, 정서적 위기 청소년 분야에서는 '국가·지자체의 정서적 위기 청소년 조기발굴 의무 및 선별검사 근거마련', 학교 밖 청소년 분야에서는 '학교 밖 청소년 학습·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재정 사용 범위 확대', 이주배경 청소년 분야에서는 '교육·체류·복지를 포괄하는 통합 지원 법·제도 마련'이 각각 가장 높은 공감을 얻었다.

□ 이날 국민대토론회에서는 그간 전국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'청소년 원스톱 지원체계'와 '청소년 전담조직' 구축을 중심으로 정책 제안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.

○ 참가자들은 청소년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 받고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방안과 기관 간 역할분담, 사례관리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.

○ 아울러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 있는 청소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·연계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책 전담조직의 필요성과 역할,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.

□ 강민아 국민경청소통분과위원장은 "지난 수개월 동안 전국의 청소년과 현장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책 사각지대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"면서,

○ "학교 안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, 어떤 가정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든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겠다"고 강조했다.

□ 통합위는 이번 국민대토론회에서 제시된 관계부처, 현장 전문가, 청소년 당사자 등 국민의 의견을 종합해 정책과제를 최종적으로 보완한 뒤, 향후 정부에 청소년 정책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할 계획이다.

○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고, 정서적 위기·학교 밖·이주배경을 비롯한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

담당 부서	국민통합위원회 경청소통협력과	책임자	과 장 박병준 (02-2100-3481)
		담당자	사무관 양서형 (02-2100-3487)